

5·18과 도시공간의 상징적 구성

정호기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

1. 머리말

한국의 20세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급박한 정치·사회적 격동기였다. 이때마다 민중들은 새로운 정치·사회체제를 갈망하였고, 때로는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지배체제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많은 사건들은 표면화되지 못하고, 지금껏 묻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의 진전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재조명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재현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군부의 권위주의정권하에서는 말하는 것 자체로 상당한 고초와 신체적 구속을 감내해야 했던 역사적 사건들이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학농민전쟁, 4·19 등은 이미 그 진상과 명예 회복, 그리고 기념사업 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반면 제주도 4·3, 여순 14연대사건, 부마항쟁, 5·18 등은 1990년대에 적극적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5·18은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각종 민중적 사건들¹⁾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재평가되고 기념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5·18은 이와 유사하게 분류될 수 있는 아시아의 여러 사례들 이라테면, 일본 오키나와의 전투 및 반전운동, 대만의 백색테러, 베트남전쟁, 중국의 천안문 사건 등의 관련자 및 연구자들과 긴밀하게 연대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 기념 또는 재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5·18의 주요 격전지였던 광주(光州)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선 곳이라는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을 도시공간 내에 구체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²⁾ 그 결과 광주에는 매우 짧은 기간에 5·18과 관련된 수많은 상징공간과 상징물이 대규모로 조성되었다. 또한 5·18은 광주를 대표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들과 경쟁관계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비엔날레로 대표되는 ‘예향’으로써의 이미지와 민주도시인 ‘의향’으로써의 이미지가 점차 후자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그 단적인 예이다.³⁾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역사적 사건 그 자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5·18 이후 계속되어진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에 근거한 민중의 저항 및 투쟁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른바 ‘5월 운동’ 혹은 ‘5월 투쟁’으로 일컬어지는 1980년대 이후의 의례투쟁과 민주화를 위한 사회운동이 5·18의 역사적 의의를 지속적으로 반추시켜왔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재평가된 역사적 사건이 도시공간에서 어떻

-
- 1) ‘민중적 사건’은 민중적 저항 및 항쟁과 관련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된 각종 학살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 사건들은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민중의 희생에 근거하며, 그 동안 거론 자체가 금기시되었고, 억압적인 국가권력의 작동방식과 정통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 2) 광주는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이지만, 5·18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성이 깊은 이미지로 정착되었다(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 1995: 163).
 - 3) 제3회 광주비엔날레는 1999년 가을에 개최되어야 했다. 그러나 1년에 대규모 행사를 두 번씩 개최하는 부담을 덜고, 민주도시로써의 광주 이미지를 극대화하고자 5·18기념행사가 열리는 기간으로 일정이 변경되었다.

게 기억되고 재현되어 생명력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의 정치를 5·18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정치적 변동 속에서 역사적 사건이 재평가되고 재현되는 과정을 지배집단과 저항집단 간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재현 공간의 구성 주체를 둘러싼 갈등과 이해관계 및 선택되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재현공간의 상징적 구성원리가 무엇이며, 이러한 의미가 형성, 고착 및 표현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관련 공간과 장소가 존재하지만,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 의해 재현공간으로 부각되지 않거나 잊혀지는 곳들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역사적 사건과 재현공간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은 특정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서로를 지지해준다. 기억과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실재(reality)의 재현 또는 구성이며,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 현상이다(Gills, 1994: 3-4). 알박스(M. Halbwachs)도 “집합적 기억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Halbwachs, 1992: 22), 이는 기억되는 방식 및 평가되는 사회적 정세와 주체들의 경험에 따라 매우 가변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밝혀내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제각기 다른 경험과 사회적 활동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변화가능성을 차단하고, 재단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복수의 집합적 기억이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주장이 힘을 갖는다(김영범, 1999).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재현하는 과정에서는 그 기억을 뒷받침해주는 정치·사회적 힘과 조직력 등에 의거하여 다양한 특성들을 지니게 되며, 강조점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 공간 속에서 재현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지만, 기념조

형물 및 기념관 등을 포함한 재현공간의 조성이 가장 일반적이다. 르페브르(H. Lefevre)의 ‘재현의 공간(space of 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르페브르는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및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과 더불어 재현의 공간이라는 세계의 차원에서 공간을 분석하고 있다.⁴⁾ 그는 재현의 공간을 “공간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의미나 가능성을 떠올리게 해주는 정신적 발명품(부호, 신호, 공간적 담론, 이상향적 계획, 상상의 경관, 그리고 심지어는 상징적 공간, 특히 건조환경, 그림, 박물관 등과 같은 구체적 구성물)”으로 파악한다(Lefevre, 1991; Harvey, 1989a: 270). 한편 하비(D. Harvey)는 위의 공간 구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간적 실천의 4가지 측면과 교차시켜 분류하고 있다(위의 책: 272). 이 틀에 의거하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재현의 공간은 ‘공간의 지배 및 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 동안 역사적 기념조형물에 대한 연구는 근대국가의 탄생과정과 관련지어 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민족적 정체성의 강화에 무명용사의 기념비나 무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 연구(Anderson, 1995)와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을 ‘전통의 발명’과 기념조형물 및 여러 형태의 기념행위들과 관련지어 설명한 연구(Hobsbawm & Ranger, 1995)가 있다. 그리고 기념조형물을 ① 이데올로기를 심는 작업, ② 장소를 랜드마크화하거나 의미화하는 역할, 그리고 ③ 민주적 성격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라는 세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기념조형물이 국가관의 형성에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Miles, 2000: 129). 반면에 하비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유사한 프랑스 혁명을 둘러

4)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 구성론의 관점에서 공간과 인식 주체라는 양극 구도를 넘어서 공간을 실천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르페브르의 공간론에서 공간적 실천은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간 속에서 그리고 공간에 걸쳐 발생하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흐름이나 이동들 그리고 상호작용들”을, 공간의 재현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지배적 사회질서가 물질적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싼 왕정과 민중들 간의 상징적 점유 및 투쟁과 해석을 프랑스 몽마르트르 언덕의 성심 대성당(the Basilica of Sacré Coeur) 건립과정과 장소성을 사례로 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Harvey, 1989b).⁵⁾

민중 저항적인 역사적 사건이 기념물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다룬 국내의 연구(정근식, 1995; 박명규, 1997)는 최근에 들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소안도 항일 기념탑과 동학농민전쟁을 기념한 수많은 기념물을 소재로 한 이 연구들은 역사적 기념물들이 건립되는 과정을 정치·사회적 맥락, 주체, 대상, 공간, 의미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⁶⁾ 한편 최근에 들어 5·18의 기념사업을 다룬 연구들이 제출되었는데(오재일·민형배, 1999; 윤기봉, 2000), 역사적 사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거나 서술하고 있어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에 강조점을 두고 도시공간의 상징적 구성을 5·18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치체제의 변동과 민중들의 투쟁 및 저항: 시기적으로 역사적 사건이 정치·사회적 쟁점들과 어떻게 조우하고 상호작용하며, 어떻게 지배집단과 저항집단들 간의 갈등구조가 형성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재현공간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 근접한 인식의 합의를 도출한 후, 그리고 선결과제들이 해

-
- 5) 세계적으로 민중들의 저항 및 투쟁을 기념한 사례들을 손호철은 3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손호철, 1995: 201-203). 첫번째는 ‘망각의 해법’에 의해 기념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스페인의 경우이다. 두번째는 ‘기억의 해법’에 의해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져 잘 조성된 프랑스, 세번째는 가해자의 지배체제가 유지되고 있거나, 현실적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한 동구,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경우이다.
- 6) 전자는 집단적 역사에 대한 기억이 ‘지우고 싶은 역사’와 ‘드러내고 싶은 역사’의 복합적 구성물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들과 역사적 경험의 충돌하고 있고, 기념탑을 읽는 방식은 미래의 영역으로 열린 문제라는 결론을 내린다. 후자는 수많은 기념물이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역사적 재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 상징물들이 만들어지며, 기념물의 상징성이 집합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된 후 추진된다. 또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인식의 합의를 강제하기도 하며, 저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구심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둘째, 주체와 자원: 재현공간의 구성에는 공간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저항집단 내외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진다. 집단의 힘이 강하고, 지속적인 저항이 이루어질수록 이들의 입장은 매우 중요한 재현공간의 구성 요인이 된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갖지만 절대적인 공통분모를 지니는 역사성과 장소감(sense of place)⁷⁾이 재현을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여기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공간들을 기억할 수 있는 행위가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재현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과 자원의 확보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원이다.

셋째, 재현공간의 구성원리와 공간의 정치: 재현공간을 구성하는 데는 공간 및 장소의 선택과 배제를 둘러싼 의미 해석과 힘 관계가 작용한다. 그리고 재현공간들은 일반적으로 추모, 의례, 체험, 계승, 교육 등과 같은 일정한 구성 원리에 입각한다. 이렇게 재현된 공간들은 도시를 텍스트로서 독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며, 일정한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3. 정치체제의 변동과 재현공간의 구성

5·18은 정치체제의 변동기마다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5·18과 관련된 재현공간의 조성은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기념사업의 실현으로 구체화된 것이

7) 장소감은 외부자보다는 내부자의 경험에 기초하는데, 어떤 장소가 물리적 특성을 지녔든 상상력에 의존하든, 혹은 실제적이든 신화적이든 의미있는 사건 및 인물과 연결되어 특징적이고 기억될 만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다른 장소와 구분되는 정체성을 지냄으로써 형성된다. 또한 일상 생활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 기억, 의도를 통하여 장소에 깊은 애착을 증진시킴으로써 형성된다(김덕현, 1996).

다. 그렇지만 재현공간의 구성 문제는 가해자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적 과제들로 정권퇴진과 민주정부수립,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학살자 처벌 등과 같은 문제가 주로 제기되었다.⁸⁾ 이러한 이슈들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5·18가해자들에게 보상이나 기념사업을 요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5·18을 기념하려는 초기의 시도는 시민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1986년 한국신학대 오산 교정에 국내 최초로 건립된 <광주사태희생자추모비>와 1987년 전남대 '5·18광장'에 세운 <5·18추모비>,⁹⁾ 그리고 보다 조직적으로 준비가 이루어졌던 1985년 『5·18광주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이하 5추위)』의 결성이 그 사례들이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까지 5·18을 기념하려는 실천은 추모비 또는 위령탑 등과 같은 기념조형물의 건립으로 가시화되었고, 이렇게 세워진 기념조형물들은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을 기념하는 소중한 상징물이었다.

5·18은 1987년의 6월시민항쟁, 7·8월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12월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면서 매우 중요한 정치·사회적 쟁점들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었고, 저항세력들에게 매우 적절한 전술적 무기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18에 대한 지배집단의 새로운 대응방식이 등장했다. 격동기의 와중이던 1987년 7월 2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위령탑 건립 등

8)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1988)는 5·18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의식조사로, '5·18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유가족 및 유가족은 단 한 사람도, 광주시민은 피조사 373명의 시민 가운데 7명(1.9%)만이 추모비 건립 및 망월동묘지의 성역화에 응답하였다.

9) 전남대 학생들은 1984년 5월부터 전남대 도서관 앞 광장을 '5·18 광장'으로 명명하고, 학교측에 5·18추모비 건립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총학생회는 독자적으로 3년 후인 1987년에 <5·18추모비>를 세웠다. 이 추모비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시위가 한창이던 1987년 12월 14일 학내로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강제 철거된 후 끝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을 포함한 ‘광주사태’ 치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 발표는 5·18을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시켰고, 비호남지역에서 바라보던 5·18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심각하게 재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유희책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는 없었으며,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을 논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래서 1988년 4월 5일 광주를 방문한 김대중 평민당 총재도 ‘광주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5·18의 해결방안으로 ‘완전한 민주화 실현, 진상규명,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유가족·부상자들에 대한 국가 유공자 차원의 처우 등’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5·18을 기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1988년 5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결성된 『5월 민주항쟁 계승과 진상 규명을 위한 범민주세력 공동투쟁위원회』가 5·18해결방안을 발표하였다. 해결방안은 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② 광주시민 명예회복, ③ 전남도청과 망월묘역¹⁰⁾의 성역화 및 기념탑 건립, ④ 국가보훈 대상자로의 예우 및 그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 ⑤ 국정교과서에 역사적 의의를 게재할 것 등 매우 구체적이었다.¹¹⁾ 이제 5·18의 재현공간 및 기념물의 건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저항집단들 내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①번 항목의 해결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12월 19일 노태우 정권이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측의 사과 표명,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격 재규정, 사망자 유가족 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피해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간기구 등 3개 대책기구 설치’ 등을 발표했지만, 5·18관련 단체들은 기만적인 해소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국가와 5·18관련 단체 및 광주시민들 간의 의견 차이와 대립은 1990년

10) 앞으로 1980년 5·18이 종료된 이후 만들어진 묘역은 ‘망월묘역’으로, 1997년 5월에 새로 조성된 묘역은 ‘5·18묘지’로 기술한다.

11) 이에 의거하여 1993년 13주기 5·18행사준비위원회는 이른바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을 발표한다. ① 진상규명, ② 책임자 처벌, ③ 기념사업, ④ 배상, ⑤ 명예회복이 그것인데, 이는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정착되었으며, 5·18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 초까지 계속되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이 ‘진상규명은 훗날 역사에 맡기자’라는 내용과 9가지의 5·18치유책을 포함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던 것이다. 5·18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광주의 여론은 명예회복, 진실규명 및 가해자 처벌과 같은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질림발이 치유책이라고 반발하였지만, 1995년 말 광주 특별법의 제정과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을 반대하던 이유는 점차 소멸되면서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가가 주관하는 5·18기념사업은 법률적 근거의 미흡,¹²⁾ 추진 주체의 문제, 대상 공간의 선정 문제, 5·18관련 단체들 내부의 입장 차이 등으로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5·18묘지는 완공되었다. 한편 구 상무대 부지에 조성된 5·18기념공원과 자유공원은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기였던 1993년 3월 16일 상무대 이전에 따른 시민공원개발 부지 10만 평 가운데 무상 양도된 5만 평과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계기로 무상 양도된 5만 평이 확보되면서, 1999년에 가시화되었다.

4. 재현공간의 주요 주체와 자원

5·18을 기념하기 위한 최초의 조직적인 대응은 1985년 광주 학림교회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5추위의 결성이었다. 이 모임에는 홍남순, 명노근, 이광우, 강신석 등 재야인사 5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5·18의 직접적인 관련자들이었다. “위령탑 건립과 기념사업(기념관

12) 당시 진행중이던 5·18기념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날치기로 통과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제3조 2항 5호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에 두는데, 기념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1994: 75).

건립)을 순수한 국민들의 성금으로 전남도청 앞 광장 주변에 건립한다”는 5추위의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능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탄압과 기금 사용을 둘러싼 갈등만 야기된 채 실행되지는 못했다. 어쨌든 이러한 시도는 5·18을 기념하기 위한 저항 공동체의 결속이 5·18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재야단체 및 시민들의 공동적 합의에 기초함을 의미했다. 또한 5·18을 기념함에 있어 어느 공간이 소중한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념 주체들의 공통적 합의는 ‘광주문제’ 해결의 5원칙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우선적인 재현공간 대상으로 망월묘역이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사업이 제기되면서 5·18문제에 공통된 의견을 보이던 입장들이 점차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의 후속조치로 본격화된 기념사업은 추진 주체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광주시는 8월 27일 광주시와 시의회, 5월단체, 대표,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의 인사가 참여한 ‘5·18기념사업 추진 협의회(이하 5추협)’이라는 기구를 두고 있었는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5추협의 성격문제와 관 주도의 폐해를 제기한 것이다.¹³⁾ 첫째, 5추협의 법적 지위와 성격에 관한 문제로, 시에서 임명한 대표가 너무 많아 모양만 협의회이지 관의 의견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었다.¹⁴⁾ 둘째,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의 일정과 방법에

13) 광주YMCA, 광주YWCA,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단체가 ‘올바른 오월성역화 사업을 위한 시민공청회 준비 모임’을 구성하고, 1993년 12월 9일 광주YMCA에서 “오월 성역화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시민공청회를 주관한 시민단체들은 이후 광주의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5월성역화를 생각하는 시민연대모임(이후 5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으로 개칭, 이하 시민연대)』을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관 주도의 기념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14) 5추협은 시공무원 7인, 시의회 7인, 관련단체 6인, 언론인 7인, 종교인 3인, 학계 등 7인 등 총 3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장이 위원장이었다. 5추협의 성격과 활동을 둘러싼 갈등은 제10차 회의에서 관련단체 1인, 종교인 2인이 탈퇴하는 사건으로 표출되었다.

관한 것이었다.¹⁵⁾ 셋째, 총체적인 기념사업이 되지 못하고 전남도청과 상무대의 기념사업과 분리되어 5·18묘지 조성사업만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5·18아이디어 공모는 1994년 2월 15일 까지 60일 연장되고, 5·18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협의회 산하에 5·18관련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5·18사업운영위원회』¹⁶⁾를 구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세번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5·18기념사업을 위한 시민공청회도 개최되지 않았다.¹⁷⁾ 당시 광주의 지방신문들은 위의 문제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¹⁸⁾ 그리고 시민연대는 4월 18일 ‘5·18광주민중항쟁 기념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가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무형의 기념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5·18기념사업이 3공간(5·18묘지, 구 상무대,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구상되어야 하고, 미래의 광주시 도시공간의 발전 구상에 이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행중인 5·18묘지의 조성에 대해서는 현장보존의 원칙, 효율적인 예산 집행, 최소한의 성역화사업, 묘역의 민주화 등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견과 비판들은 일부이지만 받아들여졌고,¹⁹⁾ 광주시로

15) 11월 27일 ‘5·18묘역 성역화에 따른 아이디어현상공모’를 했는데, 12월 15일이 마감인 이 응모작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가라는 점과 참가자격의 제한 및 응모작품 제출서류의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16) 『5·18사업운영소위원회』는 명노근 전남대 교수, 정동년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의장, 문형태 전남일보 주필, 장용주 신부, 오병남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등 직능단체 대표자 6명으로 구성되었었다.

17) 1994년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광주YMCA 앞에서 이루어진 성역화 아이디어 공모 입상작 전시가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었다. 이것 역시 자세한 설명문이 없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허술한 전시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18) 특히 《전남일보》는 “5·18광주기념사업을 위한 세계 민주성지를 가다”라는 기획글들을 신문에 연재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면서 1994년 3월 ‘5·18기념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한편 당시에 시민들은 5·18기념사업보다 앞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념사업은 관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전남일보》, 1994년 5월 4일자 시민의식조사).

하여금 종합적인 5·18기념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광주시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여(1994년 12월 23일), '5·18기념사업 종합계획'을 만들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된 후 5·18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효율적이고 총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전남지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전라남도도 용역을 발주하여(1995년 12월 22일) '5·18기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1997년에는 광주의 '5·18기념사업 종합계획'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 유적지들의 기념사업을 위해 「5·18관련 사적지 조사 및 보존에 관한 기본 조사·설계」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이 3가지 계획서가 만들어짐으로써, 5·18기념사업은 체계적인 외형을 갖추게 된다.

실제 5·18의 재현공간이 구성되는 과정에는 5·18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5·18묘지는 유족회와, 상무대 영창과 법정 등은 구속자회와 깊은 관계를 갖는 공간들이었다. 이들 단체들의 재현공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갈등은 몇 번에 걸쳐서 표출되었다. 첫번째는 5·18묘지의 부지선정의 문제였는데, 현 위치와 구 상무대 부지를 놓고 농성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문제는 5·18관련단체 운영위원들간의 표결로 결정되었다. 두번째는 구 상무대 영창과 법정의 이전 및 복원이 이루어질 5·18자유공원의 조성 문제를 둘러싸고 표출되었다. 당시 유족회가 중심이었던 「5·18기념재단」이 5추협 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바 있던 5·18자유공원 조성을 반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구속자회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장소성을 둘러싸고 진행된 이러한 갈등들은 재현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어떤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으며, 관철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
- 19) 당시 광주시는 이미 묘역 성역화 예정부지를 지정한 상태였으며, 예산도 40억 가량 책정되어 있었다. 광주시는 4월 29일 기본설계 공모를 마감하고, 남광엔지니어링과 삼정·디엔드지중합건축사무소의 공동작을 선정하여 5월 10일 마스터플랜 안으로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망월묘역이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자 시민들과 여론의 비판이 집중되었고, 이후 망월묘역이 전체적인 계획 속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집단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였다. 첫번째는 재현되는 공간들이 각각의 관련단체들과 확고한 연계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5·18의 재현공간 구성이 죽음 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강하게 배태되어 있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공간에 대한 애착은 더욱 각별했다. 두번째는 재현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조직력을 공간에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누구인가였다. 정부와 광주시는 그 동안의 5월투쟁 과정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5·18관련 단체들을 협상파트너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상당한 물리적인 힘을 갖추고 있었기에, 국가의 정책집행에 제동을 걸거나 의미를 희석화할 수 있는 존재였다. 따라서 당연히 시민단체들이나 재야단체들을 비롯하여 5·18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개입할 여지가 협소해졌고, 조직적인 집단의 힘이 뒷받침되지 못한 공간들의 재현문제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5. 상징적 구성 원리와 장소성

5·18의 재현공간은 크게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하여 조성되었다. 추모의 공간으로서의 5·18묘지, 체험의 공간으로서의 5·18기념공원 및 자유공원, 그리고 역사인식의 공간으로서의 전남도청과 그 일대이다. 이러한 재현공간들과 대비적으로 역사적 사건의 공간으로 존재하는 곳들이 있다. 즉 호명의 수준에서 표지석 또는 소공원 조성이 이루어진 곳들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무관심 내지 방치되는 곳들이다.

1) 재현공간

(1) 추모의 공간

망월묘역과 5·18묘지는 모두 5·18의 희생자들이 안장되어 있으며, 후자에 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띠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 의미가 다

르다. 5·18묘지는 추모의 의미가 강하지만, 망월묘역은 추모뿐만 아니라, 한과 분노 그리고 투쟁을 위한 각오와 결의가 담겨있었다.

망월묘역은 5·18이 종료된 후 계엄군에 의해 조성되었다.²⁰⁾ 망월묘역이 5·18을 상기하는 확고한 상징 공간이 되어가자, 전두환 정권은 전남지역개발협의회²¹⁾를 전면에 세워 1984년 11월까지 망월묘역의 해체와 의미의 퇴색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모두 26기가 이장되었는데, 유족회와 학생 및 시민들의 반발로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다. 전두환 정권은 이 공간을 끝까지 부정하였고, 해마다 5월이면 이 곳을 찾는 유가족과 시민들은 갖가지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식적으로 추모식이 거행되기 시작하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망월묘역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망월묘역의 상징성은 한과 분노를 삼키는 곳에서 민주사회를 향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공간으로 확장되어갔다. 수많은 학생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민주화관련 운동가들이 망월묘역에서 투쟁의 출사표를 던지고, 결의를 다졌으며, 결과를 보고하였던 것이다.

망월묘역의 장소성은 국가권력과 민중의 대립구도 속에서 성장하였다. 1980년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장례투쟁을 거쳐 망월묘역에 안장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망월묘역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더욱 강화되었고, 민중에게 열린 공간으로써 확고하게 정착되어 갔다. 그렇다고 망월묘역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5·6 공시절 상당수의 지배권력자가 망월묘역을 방문하고자 했으나, 학생들과

20) 망월묘역은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엄군의 엄격한 통제하에 전남 도청 앞 상무관에 보관되어 있던 126기의 5·18 희생자들을 청소차에 실어 광주시 운정동 시립공원묘지 3묘역 1,000여 평에 매장함으로써 생겨났다. 당시의 처참한 상황은 5·18묘지로의 이장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1) 전남지역개발협의회는 지역 내외의 기업체 및 자본가 등으로부터 모은 60억 원 가운데 41억3천여 만원을 기금으로 1983년부터 활동을 개시한 민간단체였다.

유가족 및 재야단체들의 반대시위로 번번이 무산되거나 봉변을 당했다.

이러한 역사성으로 인해 5·18의 첫 재현공간인 5·18묘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산 34번지 일원 50,280평에 261억 원이 투입되어 1994년 11월 1일 착공하여 1997년 5월 16일 ‘추모의 장’으로 조성되었다. 5·18 묘지는 4·19묘지가 참조되었는데, 민주의 문, 연못 및 석교, 추념문, 민주광장, 유영봉안소, 참배광장, 참배단, 5·18 민주항쟁 추모탑, 3천여 평의 묘역,²²⁾ 그리고 부조 일곱마당, 야외공연장, 민주동산, 신·구묘역 연결다리, 송모루(崇慕樓), 헌수기념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³⁾ 현재에는 5·18묘지 후속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묘지 옆 구 도로 2,440평에 유물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5·18묘지가 조성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이 공간에 ‘역사 청산 완료’, ‘화해’, ‘평화’라는 담론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97년 정부가 주관하는 5·18기념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중앙관료 및 정치인들이 매우 정중한 모습으로 자리를 채웠고, 이들이 보낸 10여 개의 조화도 배치되었다. 행사는 몇몇 학생들의 소동(?)²⁴⁾을 제외하면 시종일관 엄숙하

22) 이장은 1997년 4월 27일 유족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80% 이상이 동의를 함으로써 5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망월묘역에 묻혀 있던 124기가 기념식 하루전날인 16일까지 이장 완료되고, 나머지는 기념식 이후에 추진되었다. 추진되지 못한 29기는 국가유공자 지정 및 국립묘지 승격을 요구하며 일부 유가족들이 거부의사를 표명한 18기와 무연고 묘 11기였다.

23) 유영보관소는 5·18영령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통고분인 고인돌 형태를 응용하여 만든 것이며, 5·18민주항쟁 추모탑은 당간지주의 형태를 띤 탑신 중앙에 계란형 조형물 감싸안은 손모양으로 5·18정신이 삼라만상과 우주를 꿰뚫어 범우주적 존재로 승화하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조 일곱마당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동학농민전쟁→3·1운동→광주학생독립운동→4·19혁명→5·18민주화운동→통일마당 순으로 조성되었으며, 송모루는 전망대이자 5·18영사실로 활용된다. 헌수기념비에는 1996년 9월 ‘5·18민주나무 헌수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24) 당시 학생들은 ‘류재을 사망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5·18기간에 도청 앞 광장에서 노제를 지내고 망월묘역에 안장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고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주관하는 다른 추모 행사와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열린 5·18묘지 준공식에 참석하였는데, 방명록에 ‘영원한 승리’라고 썼고, 1998년 대통령자격으로 망월묘역을 방문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일부 5·18관련 단체의 공수부대 방문, 11공수특전단을 비롯하여 군장성들의 5·18묘지 참배, 전투경찰들의 5·18묘지 청소 등은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습들이었다.²⁵⁾

한편 이 공간이 지닌 상징적 의미의 분화는 5·18묘지로의 이장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시국관련 사망자 32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분명해졌다. 이 갈등은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와 ‘5·18유가족회’ 간의 대립을 초래하였는데, 반대 이유는 지역적 형평성 문제와 국립묘지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5·18이 독자적 사건으로 홀로 서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도권 내로 포섭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귀결물이었다.²⁶⁾

(2) 체험의 공간

구 상무대부지에는 ‘역사체험의 장’을 목적으로 하는 5·18기념공원과 자유공원이 조성되었다. 5·18기념공원은 미래지향적으로 5·18정신을 계

광주시뿐만 아니라 5·18관련 단체들도 반대하여 5·18행사 기간 이후에 장례를 치루었다.

- 25) 손호철은 이러한 모습들을 “이들에게 이제 5·18민중항쟁 기념행사란 하나의 저항의 행위가 아니라 제도화된 제식일 따름이다. 한마디로 김대중 정권 출범에 따라 5·18민중항쟁의 변혁적 함의를 거세하고 제도화시켜려는 수동혁명은 완성되고 말았다”고 비판하고 있다(손호철, 1999: 16).
- 26) 우연히 발견한 망월묘역의 제단 아래 놓여진 조그만 돌에 쓰여진 다음의 글귀는 이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었다. <“이곳에도 분단의 아픔은 있다. 백토(白土)가 되버린 뼈들은 저곳 신묘역으로 이장됐는데, 그대들의 영혼과 사상의 찌꺼기는 아직 이곳 구묘역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살아 있는 자의 살아남은 자들의 또 다른 만행이다. 단지 의미 없이 돈으로 치장한 저기보다 초라하지만 영혼과 사상이 숨쉬는 이곳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1997. 8. 13. 김현용>

승·승화하는 5·18기념·문화 공간, 도시활동공간의 일부인 시민 일상생활의 장, 5·18의 역사적 의미를 체험하고 승화시키는 공간, 그리고 관광명소를 위한 기념공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이 공간에는 5·18 기념문화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현황조각 및 추모승화공간, 그리고 상징탑 등이 건설되었거나, 조성중이다.

구 상무대 부지에는 광주시청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관공서가 이전할 예정이며,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곳의 기념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조성되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체험 및 계승 공간으로 기능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내용을 갖춘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상무대 영창과 법정은 17일의 예비검속자들뿐만 아니라, 5·18과 관련된 사람들이 감금되고, 재판받을 곳이다. 그래서 5·18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특히 구속자들에게 상무대 영창과 법정은 결코 잊지 못하는 공간이다. 폭력과 고문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 깊이 각인된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다는 절망감과 패배의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무서운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살았다는 안도감과 죽어간 시민군 및 희생자들에게 해방광주를 끝까지 지켜 내지 못한 죄책감이 혼합되어 엄청난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역사성으로 기리고자 5·18자유공원이 조성되었다. 이곳에는 영창 및 법정뿐만 아니라 창고와 헌병대 식당, 내무반, 사무실, 식기세척장 등이 1999년 5월 4일에 이전·복원되었으며, 아울러 자유관까지 건립되어 당시를 되새기는 소중한 재현공간으로 탄생하였다.

(3) 역사인식의 공간

5·18이 민중투쟁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통치체계가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힘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전남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충장로 일대를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의 공간이며 피와 죽음으로 생취하고 사수한 승리와 해방의 공간으로 기억한다. 시민들에 의해 점령된 전남도청과 그 일대의 주요 건물들은 해방기간(5월 22일~26일까지) 동안 시민군의 본부 및 시위 및 전투를 준비하는 장소였으며, 계엄군의 재진입을 방어한 최후의 격전지였다.

그렇지만 이 공간이 더욱 확실하게 상징적 의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5·18 이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였다. 해마다 5월이면 광주의 저항적 분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5월투쟁 및 5월행사라는 의례화를 통해 정점에 도달하였다(정근식, 1999). 또한 전남도청 앞 광장 및 그 일대에서 이루어진 수십 차례에 걸친 장례 투쟁과 대중시위들도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고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정근식, 1996; 정호기, 1996).

비합법적으로 의례화가 이루어지던 때부터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거리정치를 통해 5·18을 재현하였다. 1987년에는 경찰과 대치 및 격투 끝에 처음으로 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에서 5·18추모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부분적으로 5·18기념행사가 용인되던, 즉 반합법적인 시기였던 1988년부터는 격렬한 시위를 거치기는 했지만 도청 앞 기념행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정세에 따라 경찰과 충돌은 있었지만, 사실상 이 공간에서 5·18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광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및 장례투쟁이 목표로 하는 공간 역시 전남도청 앞 광장이다.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부 시민들이 치열한 투쟁을 통해 일단 공간을 확보하면, 군중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이러한 공간적 의미로 인해 정치적 시위가 발생할 때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이면 으레 이 공간으로 사람들이 군집하였다. 거리정치에 의한 학습효과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이들은 김대중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바로 그 날 그

곳에서 그 동안의 설움과 분노를 달랬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었다. 이 날을 마지막으로 그곳에서는 단 한번의 거리정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²⁷⁾ 대통령에 김대중이 당선됨으로써 그 동안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던 암묵적 집단 목표가 사라졌고, 이제 이 공간은 점차 5·18이라는 사건 그 자체로 제한된 상징적 공간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전남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 일대의 재현공간 조성사업은 1999년 6월 도청의 이전이 확정된 후 ‘역사인식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계획으로는 5,801평에 250억의 국비를 들여 5·18기념광장을 조성하고, 당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건물의 외형을 복원한다는 것이다.²⁸⁾ 현재 도청 정문 옆에 세워진 <5·18민중항쟁 알림탑>은 전라남도가 추진한 첫 5·18기념사업으로, 1997년 5월 16일에 완공되었다.

한편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는 이 공간이 다른 평범한 공간들에 비해 우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첫번째 사례는 금남로 1~3가에 지하상가와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청 앞 분수대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무산시킨 것이다. 분수대의 해체가 공사비 절감과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보장해주는 것이지만, 광주의 여론은 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고, 불편함이 감수되더라도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광주역 광장 분수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5·18의 상징공간과 상징물들이 사라졌지만, 도청 앞 분수대만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두번째 사례는 도시공간의 합리적 재구성, 즉 광주의 교통 흐름을 크게

27) 종종 전남도청 정문에서 집회와 시위는 있었는데, 지역개발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대다수였다.

28) 본관에는 소규모 전시실, 5·18역사관, 5·18기념재단 사무실이, 최후의 항전지였던 회의실(현재의 민원실)에는 시청각 및 집회실, 다목적광장, 공연장 등이, 그리고 도의회 건물에는 회의실, 소극장, 5·18단체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방침이다. 또한 기념탑과 기념부조물 각각 1식이 조성될 예정이다.

저해하는 장애요소인 전남도청 본관의 해체 문제였다. 도청은 일제하에 터를 잡은 것으로 도시의 중심이 되는 금남로의 초입에 배치되어 있다. 그렇지만 광주의 여론은 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전남도청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5·18을 상징하는, 그리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2) 역사적 사건의 공간

5·18과 관련된 상징공간과 상징물은 사건의 규모에 비례하여 매우 다양하고 상당수에 이른다. 그렇다고 관련된 모든 곳들이 다 기억되고 상징적 구성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연하게 철거를 요구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동의하에 무관심 또는 방치되는 곳과 표지석 및 소공원 조성 등이 유적지 보존 사업이 이루어진 곳 등 역사적 사건의 공간들이 존재한다. 이는 민중적 사건이 기념되는 과정에서 강조되거나, 약화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무관심 또는 방치된 역사적 사건의 공간들은 당시 시민들의 공격을 받았던 국가기구들이 존재하던 곳들이다. 항쟁기간 동안 시민들은 총장로 파출소를 시작으로 광주시내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파출소를 파괴하였다.

<표> 5·18관련 주요 도시공간 및 상징물의 변화 형태

	지속된 사례들	사라진 사례들	재구성된 사례들
주요 도시 공간과 상징물의 변화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도청 및 분수대 (분수대 일부 개축) • 광주역과 광장 • 망월묘역 • 구 MBC광주방송국 • 광주YWCA • 광주공원 • 상무관 • 광주교도소 • 가톨릭센터 • 무등경기장 정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YWCA • 상무대 • 시외버스공용터미널(광주은행 본점과 롯데백화점이 들어섬) • 광주역 분수대 • 녹두서점 • 회순 너릿재부근 • 주남마을 도로(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묘지와 각종 기념물 및 기념공간의 조성 • 상무대 법정과 영창(상무대 이전에 따라 5·18자유공원에 이전·복원됨) • 전남대학교 정문과 그 일대(정문과 다리는 해체되었고, 소공원을 조성함)

* '사라진'은 완전히 해체 또는 변화되어 과거의 흔적과 형태를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

함. 시민들에게 권위와 억압의 침병으로 인식되었던 파출소는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 및 군과 동일시되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기구에 대한 공격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광주세무서는 “세금은 다 같이 잘 살자고 내는 것이지, 미국에서 무기 수입해다 제 국민을 죽이라고 낸 것은 아니다”(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1985: 101)라는 주장과 함께 불탔으며, 국세청, 노동청, 광주소방서, 광주지검, 법원 청사, 북구청 등이 비슷한 이유로 시민들의 공격을 받아 불탔거나 파괴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구조물들의 상당수는 과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거나 엄청나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적지를 보존하지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

한편 광주시는 1998년 10월 24일의 앞에서 언급한 3공간을 제외한 주요 5·18사적지 24개소에 표지석과 안내표시판을 설치하고,²⁹⁾ 이 가운데 전남대정문 앞, 주남마을 입구, 망월묘역 등 3곳에는 소공원을 조성하였다.³⁰⁾ 이 장소들은 기념사업들을 통해 역사적 호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재현공간에 비해 역사적 사건과 관계된 장소로만 기억될 뿐이다. 그리고 중요한 역사성을 갖는 곳이지만, 재현공간의 구성원리에 비추어볼 때 가벼운 의미를 갖는 공간이 있다. 화염병을 제작했던 녹두서점, 유인물을 제작했던 구 무등육아원과 들불야학터, 남동성당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이 조직되었던 곳들이 이에 해당된다.

29) 기념조형물이 세워진 곳은 전남대학교 정문, 광주역 광장, 구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일대, 금남로, 전남도청, 민주광장, 상무관, 광주YMCA, 광주YWCA, 녹두서점 옛터,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구 광주적십자병원, 조선대학교, 배고픈다리 일대, 주남마을 인근 양민학살지, 광목간 양민 학살지, 농성광장 격전지, 상무대 옛터, 무등경기장 정문, 양동시장, 광주공원광장, 계림동 동원빌딩 앞 최초 발포지, 광주교도소, 국군광주병원, 망월묘역 등이다.

30) 전라남도 역시 도비로 5·18과 관련이 깊은 도내 8개 시·군 73개소에 기념안내판과 표지석을 설치하였으며, 몇 곳에 기념공원과 연구소 설립 방안을 모색중이다.

6. 맺음말

5·18은 부정적으로 기억되던 역사적 사건이 반전되어, 새롭게 해석되고 기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생생한 실례이다. 덕분에 광주는 약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재현공간과 상징물들을 보유하여, 보다 분명하게 독해될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도시공간에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5·18은 항상 한국 정치변동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5·18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5·18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인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하에서는 무단통치와 유화공작을 통해 5·18이 갖는 저항의 예봉을 피해하려고 했고, 김영삼 정권 역시 기존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강했다. 그 결과는 국가적 차원의 ‘기념’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여기에서 상징적 재현공간의 구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18과 관련된 기념물과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은 광주의 저항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들의 힘과 지지에 근거하여 5·18을 기념하려는 것은 5·18이 지닌 역사성과 의의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저항 공동체는 1988년 5·18해결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기념사업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들의 분명한 해결을 전제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집합적 정체성은 5·18 가해자들이 베푸는 시혜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수 있게 하였고, 박제화된 5·18의 기념을 경계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그 후속조치는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현실적으로 5·18에 대한 재평가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은 과거와 확실히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구체화되는 기념사업을 방관할 수 없었다. 이처럼 5·18의 재현공

간은 국가와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그리고 저항 공동체에서 기억과 경험에 뿌리를 둔 집단들의 공간에 대한 이해관계 속에서 탄생하였다.

재현공간의 구성 주체를 둘러싼 문제는 관이 주도하려는 경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함으로써 전면화되었다. 관주도의 폐해성은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위원회의 구성과 총체적이지 못한 기념사업의 진행에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역사성과 경험의 결절 공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우러지는 광주의 도시발전 구상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광주시는 이러한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였고,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갔다.

역사적 사건은 외적으로는 하나인 것 같지만, 내적으로 각 집단별로 다양한 기억에 근거하여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재현공간을 구성하고 상징적 의미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분화되는가로 드러난다. 실제 재현공간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각 공간에 대해 다른 경험과 의미를 갖고 있던 5·18관련단체들은 재현공간의 위치, 방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대립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그 동안의 5월 투쟁 과정에서 상당한 구심력을 갖춘 집단으로 성장하였고, 재현공간은 이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곳이기에, 이들의 입장은 재현공간 형성에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재현공간은 추모의 공간, 체험의 공간, 그리고 역사인식의 공간이라는 원리에 의해 구성되었고, 집단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역사적 사건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특히 3공간이 주요한 재현공간으로 선정되는 데는 역사성과 더불어 집합적 기억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망월묘역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었기에 그 상징적 의미를 더욱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확장시킬 수 있었다. 망월묘역은 성스런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한 충실한 과정을 밟았던 것이다. 반면 5·18묘지는 과거 망월묘역이 갖는 한, 분노 그리고 투쟁적 의미를 추모라는 담론으로 통일시켰다. 5·18묘지는 5·18 그 자체만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되고자 했고,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추모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측면이 강했다. 한편 5·18기념공원은 역사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시민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함께 존재하려는, 그리고 그 때를 체험하고 교육함으로써 계승하려는 목적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5·18자유공원은 당시 이곳을 거쳐갔던 구속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절망감, 그리고 안도감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역사성을 지닌 장소였기에 재현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세번째로 전남도청과 그 일대는 죽음, 승리 그리고 해방이라는 경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공간이다. 1980년 이후 계속된 5월투쟁과 거리정치, 그리고 장례투쟁 등은 이 공간이 지닌 저항적 정체성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고, 사람들은 저항의 의미와 행위를 이 공간을 통해 학습하였다. 오늘날 이 공간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중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지만, 항상 개연성이 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공간은 공간의 생명력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위의 세 공간 이외에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간에 역사 속의 공간으로만 기억되는 곳들이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거나, 강조점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중요한 상징적 재현공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5·18기념사업은 현재적 관점과 시대적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5·18을 경험하지 못한 동세대들과 후세대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재현공간들을 통해 5·18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학습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1995, 『5·18기념사업 종합계획』.
- 김덕현. 1996, 『장소성과 장소구축』, 《사회과학연구》 제14집,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영범. 1998,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99, 「집단학살과 집합기억—그 역사화를 위하여」, 『냉전시대 동아시아 양민학살의 역사』, 제주4·3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 박명규. 1997,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사회와 역사》 통권 제51호, 문학과지성사.
- 손호철. 1995, 「보론 1: 세계 민주화운동과 5·18민주항쟁」,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 _____. 1999, 「“기억을 둘러싼 계급투쟁”—5·18 민주항쟁, 김대중정권, 그리고 노동자계급」, 《현장에서 미래를》 43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오월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1994, 「진실은 발자국에 고여 있다—오월성역화 문제와 관련한 광주시민 활동 보고서」.
- 오재일·민형배. 1999, 「5·18광주민중항쟁 기념사업의 평가와 전망」,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주최, “해외에서의 5월운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 발표문.
- 윤기봉. 2000, 「5·18정신 계승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5·18기념행사를 중심으로」,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무용. 1998, 「도시공간의 문화정치」, 『현대도시이론의 전환』, 한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5·18관련 사적지 조사 및 보존에 관한 기본 조사·설계」.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 1995, 「전남이미지 실태 연구」.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 기록. 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 전남일보사. 1994, 「5·18광주기념사업을 위한 세계 민주성지를 가다」.
- 전라남도. 1996, 「5·18기념사업 종합계획」.
- 정근식. 1995, 「집단적 역사 경험과 그 재생의 지평」, 『설화와 의식의 사회사』, 문학과지성사.
- _____. 1996, 「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경제와 사회》 30호, 한울.
- _____. 1997, 「민주화와 5월운동, 집단적 망탈리테의 변화」,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_____. 1999, 「사회운동과 5월 의례, 그리고 5월 축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새길.
- 정문영. 1999, 「광주 ‘5월 행사’의 사회적 기원—의례를 통한 지방의 역사 읽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정호기. 1996, 「지배와 저항, 그리고 도시공간의 사회사—충장로, 금남로를

-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7호,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_____. 1999, 「지역정체성과 도시공간의 상징적 재구성—5·18을 중심으로」, 1999년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조명래. 1996, 「지역정체성과 지역운동」, 《공간과 사회》, 7호, 한울.
-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편. 1988, 「광주시민 사회의식조사—광주민중항쟁을 중심으로」, 빛고을 출판사.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광주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 기타 광주에서 발행되는 지방신문들(《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광주매일》, 《호남신문》, 《전남매일》 등)
-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최석영 역, 1995, 『민족의식의 역사인류학』, 서경문화사).
- Casey, E. 1995, *Place Memory and Urban Preservation, The Power of Place*, London: The MIT Press.
- Gills, J. R.(eds.) 1994, *Commemoration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lbwachs, M., Coser, L. A.(trans.) 1992, *On Collective Mem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vey, D. 1989a,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I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lackwell Publishers(구동회·박영민 역,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 _____. 1989b, *The Urban Experience*, Oxford: The Johns Hopkins Univ. Press(초의수 역, 1995, 『도시의 정치경제학』, 한울).
- Hobsbawm, E. & Ranger, T.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최석영 역, 1995, 『전통의 창조와 날조』, 서경문화사).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 Miles, M. 1997, *Art, Space and The City*, UK: Routledge(박삼철 역, 2000, 『미술, 공간, 도시』, 학고재).